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mendment of 「Building Act」 and Subordinate Legislation for CPTED

조영진 Cho, Young-Jin
손동필 Son, Dong-Pil

(a u r i

AURI-정책-2016-3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Amendment of 「Building Act」 and Subordinate Legislation for CPTED

지은이: 조영진, 손동필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6년 8월 26일, 발행: 2016년 8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9,000원, ISBN: 979-11-5659-081-1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조영진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손동필 연구위원
Ⅰ 연구보조원	지혜란 연구원, 김서영 연구원, 이상희 연구원

Ⅰ 연구심의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엄정희 국토교통부 과장 윤혁경 A&U Design Group 대표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Ⅰ 연구자문위원	김두성 경찰청 생활안전과 계장 박인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준승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이사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윤기 금천구청 건축과 과장 윤혁경 A&U Design Group 대표 이경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하미경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개요

- 2014년 5월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
- 2016년 현재 관련 제도의 도입 초기인 만큼 조문의 해석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민원자료와 국내외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선안은 쉼테드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를 통하여 수정·보완 후 제도 개선안 제안

● 정책제언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범죄에 취약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신설 제안
- 침입방어 성능기준, 용도변경 시 고시준용여부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조문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조문 개정안 제시
- 건축물의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방안 제시
- 건축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개정이 시급한 조문을 중심으로 부분 개정을 시행하고 향후 단계별 도입방안 제안

● 기대효과

- 관련 민원사례 등 실증 자료를 통한 법, 시행령, 고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법 및 하위 법령의 쉼테드 관련 규정 체계 정립
- 현 건축계 산업 현황 및 범죄발생 실태 등을 반영하여 단기적인 법률 개정안과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법안 시행 계획을 병행 제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축물 쉼테드에 대한 산업계 인식제고와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의 확산 기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지난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범죄안전을 위한 건축법령의 개정과 고시의 시행은 타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선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셉테드가 반영된 건축법의 시행 이후 이와 관계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의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셉테드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 역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의 범죄예방 관련 조문 검토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민원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은 셉테드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기준 현황 분석

국내 건축법은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개 조문이 있으며,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시행령과 고시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 범죄예방 관련 자치법규는 2016년 5월 16일 기준 67개 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등의 명칭으로 도입하고 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여러 법령에서 범죄예방이라는 단어는 언급되고는 있으나, 셉테드가 아닌 포괄적 범죄예방조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건축물 방법성능기준 관련 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으로 KS F 2637(동하중 재하시험), KS F 2638(정하중 재하시험)이 있으며, 단체표준으로는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의 방범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방범문에 대한 표준이 있다. KS기준은 관련 제품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단체표준은 시험원에 의한 실험에 기초하고 있다.

해외 관련 법제 조사결과 영국의 경우 2015년 10월 건축규정에 Q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주택에 관하여 침입방어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 NSW주 정부는 ‘환경설계평가법 제79c조(Section 79c)’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가 지침(National Guideline)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목표 하에 핵심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방범우량맨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관련 민원 및 전문가 의견 분석

2015년 4월~2016년 6월까지 접수된 총 39건의 민원 및 관원을 분석하

였으며, 분석결과 고시의 침입방어성능기준과 용도변경 시 고시준용여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문 개정이 시급하고, 일부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셰테드 전문가, 교수, 건축사, 경찰, 공무원 등 10인의 전문가로 범죄예방 건축법제 개정 TF를 조직 및 운영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 고시 의무대상 및 권장대상 건축물의 타당성과 개정 방향, 침입방어 성능기준의 내용과 적정성 등을 논의하였다.

제4장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건축법 개정안은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의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건축물의 범죄안전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주택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의무 적용 되었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의 ‘설계도서검토’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추가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은 건축물의 침입 방어 성능 용어 정의 신설, 다세대/다가구 주택 범죄예방 건축기준 신설, 건축물 창호 침입 방어 성능기준 관계조문 개정,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시 고시 적용에 대한 명문화, [별표1]에 창호 침입 방어 성능기준 증명 신설, 기존 조문 중 해석이 모호한 문구 개정 등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보다 효과적인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방범산업 분야 등이 미성숙되어 있어, 개정이 시급한 조문을 중심으로 부분개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과 범죄예방 관련 분야 인식 개선으로 전면 도입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 전면개정을 통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입범죄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의무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발생 건수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범죄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용도별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 예방환경설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 기준은 권장적용으로 완화하였으나, 이는 현재 창호자재 산업의 실태를 반영한 조치이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해서는 의무적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예방 건축기준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기준 현황 분석	11
1. 국내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률 분석	11
1)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분석	11
2) 범죄예방 관련 관계 법령 현황	16
2. 국내 건축물 방법성능기준 관련 현황	18
1)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조사·분석	18
2)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SDT-Korea) 단체표준 조사·분석	19
3. 국외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 기준 현황 분석	22
1) 영국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2
2) 호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4
3) 뉴질랜드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5
4) 그 외 국가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6

5) 해외 방법제품 성능기준 현황	27
6) 시사점	29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민원 및 전문가 의견 분석31

1.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민원 조사·분석	31
1) 접수 민원 유형화	31
2) 접수 민원 내용 분석	32
2. 전문가 의견조사	35
1) 조사 개요	35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7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46

제4장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49

1.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49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54
1) 주요개정 내용과 추진방향	54
2) 조문별 개정안	55

제5장 결론69

1. 연구 결과 종합	69
-------------------	----

■ 참고문헌	77
■ SUMMARY	79
■ 부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83

표 차례

[표 1-1] 지자체별 범죄예방 관련 자치법규 현황	2
[표 1-2] 2014년 아파트 건축물 현황	3
[표 1-3] 2014년 단독·공동주택의 건축물 현황 및 범죄발생건수	4
[표 1-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표 2-1]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2016.05.16. 기준)	14
[표 2-2] 단체표준 적용범위 및 평가방법	20
[표 2-3] 외국의 하드웨어 침입저항 성능/시험 표준 내용 비교	28
[표 3-1] 전문가 TF 위원 명단	3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0
[그림 2-1]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 연도별·권역별 제정 현황	13
[그림 2-2] 네델란드 SKG/SKH KOMO인증 마크와 인증서 그리고 성능시험 장면	27
[그림 3-1] 국토교통부 접수 민원 분석 결과	31
[그림 3-2] 1차 TF회의 사진	36
[그림 3-3] 2차 TF회의 사진	3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 법령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을 통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¹⁾ 제도화 확산

-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고시 시행 후,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정 확산

–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2013.01.09.) 후, 경기도,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빠르게 도입

※ (2016년 5월 16일 기준) 권역별로 수도권 11개, 충청권 10개, 강원권 9개, 호남권 9개, 영남권 27개로 총 66개의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정

※ (2016년 5월 16일 기준) 2013년 10월 30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을 필두로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

1) 통상 우리말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으로 지칭

[표 1-2] 지자체별 범죄예방 관련 자치법규 현황

권역	지역
수도권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인천광역시 남구
충청권 (10)	충청남도,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주시, 충주시
강원권 (9)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호남권 (10)	전라남도,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무주군, 전주시
영남권 (2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산시,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거제시

* 출처: 법제처 범죄예방 관련 자치법규 검색(2016.05.16. 검색)

-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의무화
 -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
- 2015년 4월 1일 고시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 적용대상, 범죄예방 공통기준 및 건축물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시

□ 건축법의 범죄예방 관련 기준 도입에 따른 민원 발생

- 관련 법령 시행 후 약 1년 간 관련 조항의 해석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 해당 법령과 고시는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해당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
 - 해당 인허가 대상 건축물이 기준적용 대상 유무 확인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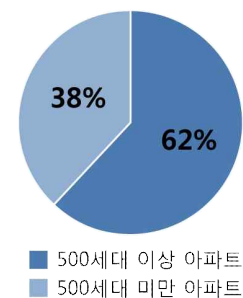
□ 기존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의 개정 필요

-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실제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용도 중심으로 적용대상과 적용 범위 등의 재검토 필요
 - 범죄예방 건축기준 권장대상인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에 달함에 따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검토 필요

[표 1-2] 2014년 아파트 건축물 현황

구분 (단위)	동수 (동)	연면적 (10만㎡)	세대수 (세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70,996 (56%)	7,789.28 (59%)	4,936,878 (62%)
500세대 미만 아파트	55,229 (44%)	5,392.84 (41%)	3,010,428 (38%)

아파트 세대수 현황



* 자료: 세대수, 연면적, 동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 정보 활용(2014년 12월 말 기준)

- 연면적 10만㎡당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권장 적용 대상인 단독주택(7.96건)이 의무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3.02건)보다 약 2.6 배의 범죄가 더 발생하고 있어 보다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무 적용 검토 필요

[표 1-3] 2014년 단독·공동주택의 건축물 현황 및 범죄발생건수

구분 (단위)	연면적 (10만㎡)	동수 (천 동)	범죄발생건수 ³⁾ (건)	10만㎡당 범죄발생건수 (건/10만㎡)
단독주택 ¹⁾	4,804.35	4,150	38,232	7.96
공동주택 ²⁾	11,198.76	384	33,777	3.02

주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3)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포함

* 자료출처: 세대수, 연면적, 동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 정보 활용(2014년 12월말 기준) ;경찰청(2014), 2014범죄통계, pp.358~361

-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조항에 대한 재개정 필요
 - (적용 대상 및 범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적용대상)와 부칙 제2조 등 고시 적용 대상 및 범위 관련 조항 재개정
 - (침입방어성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등 침입방어성능 관련 조항 재개정
 - (행정절차)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허가·신고 등의 세부진행절차 및 평가기관, 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명시하도록 조항 재개정
- 고시 시행 이후 셉테드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관련 법안 반영 기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주요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셉테드 기준의 수립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정기구 도입 검토
 - (미국) 범죄예방설계평가 조례를 통한 환경설계 규정을 강화하여 신축, 증·개축, 건물 등기시 CPTED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숙박시설, 야간업무시설, 편의점 등에 별도의 방범설계 기준을 적용
 - (영국) 계획 및 설계단계에 환경설계를 도입하고, 셉테드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운영하고 있으며, Greater Manchester 주에서는 대규모 개발계획 신청 시 범죄영향평가

(Crime Impact Statement, CIS) 시행을 의무로 규정

- (네덜란드) 영국 SBD와 유사한 제도로 경찰안전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주로 침입절도 예방을 목적으로 설비재료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마크 부여
- (일본) 2005년부터 방범우량맨션제도 등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한 주택 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방범지침을 적용한 단지에 인센티브 부여

2) 연구의 목적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의 범죄예방 관련 조문 검토
-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범죄예방 관련 제도 연구

- 국내외 범죄예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거나 셉테드 원리 및 주요이론을 바탕으로 셉테드 설계지침 및 활용방안 마련
 - 신의기 외(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에서 국내외 현황 및 제도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
 - 유광흠 외(2012)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기법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법을 도출하여 지침 및 활용방안 마련
 - 유광흠 외(2014)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에서는 국내에 부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출하여 설계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검증을 통해 도출한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 방법 관련 연구

- 비교적 최근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방법 관련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향후 관련 제도 및 기준 수립 방향 제시
 - 박현호 외(2013b)는 ‘방법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인증·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방법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연구’ 등 국내외 관련 방법 성능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방법사업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 및 법률안 제시
 - 조영진 외(2015)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에서 6가지 범죄위험평가 방법의 제안과 함께 도구를 개발하고 대상지에 적용·평가하여 도구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범죄위험평가모델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범죄위험평가도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민원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표 1-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 연구자(년도): 신의기 외(2008)- 연구목적: CPTED 전략에 대해 국내외 실태 및 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 CPTED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범죄통계 분석- 공무원 설문조사- 강·절도범 수용자 조사 및 GIS를 이용한 구도시와 신도시 간 범죄 발생패턴 분석- 외국 주요 조례 및 지침 분석- 국내외 교육제도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범죄학이론과 해외 선행사례, 국내 실태 조사분석과 CPTED 효과성 분석- 국내외 실태 및 제도를 소개·분석하여 국내에서 CPTED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연구자(년도): 유광흠 외(2012)- 연구목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인을 활용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지침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CPTED 지침을 이용하여 국내환경에 부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도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거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도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에 대한 검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중 국내에 적용가능한 기법 도출-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설계기준 지침 마련-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활용 방안 마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방법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연구- 연구자(년도): 박현호 외(2013a)- 연구목적: 한국형 건축물 하드웨어 시험인증 체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주요 외국 사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유관 인증체계를 탐색하여 한국형 방법하드웨어 인증체계 모형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방법하드웨어 인증제도 사례 조사- 국내 유사 인증제도 사례에 대해 비교사례연구 실시- 문헌 분석에 의한 2차 분석 및 담론분석- 해외 전문가와 전화 및 전자우편 연락 등을 통한 면접조사- 국내 전문가 인터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방법하드웨어 성능 시험 및 인증시스템 조사- 국내 관련 인증 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 관련 방법산업 분야의 품질관리와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안을 위한 법률안 제안- 한국형 인증시스템 모형의 틀과 내용도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유광흠 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분석- 범죄예방 설계요소와 가이드라인 및 지침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축도시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4	- 연구목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인을 활용하여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방안 도출	- 건축설계실무자 대상 면담조사 - 획요소를 결합하여 CPTED 적용요소 개발 - 다양한 셉테드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검토 -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도출
	5	- 과제명: 방법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인증·체계에 관한 모형연구 - 연구자(년도): 박현호 외(2013b) - 연구목적: 주요 외국 사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유관 인증체계를 탐색하여 한국형 방법하드웨어 인증체계 모형 도출	- 해외의 방법하드웨어 인증제도와 국내의 유사 인증제도 사례에 대한 비교사례연구 실시 - 문헌 분석에 의한 2차 분석 및 담론분석 - 해외 전문가와 전화 및 전자우편 연락 등을 통한 면접조사 - 국내 전문가 인터뷰조사 - 해외 하드웨어 침입저항 성능시험 인증 체계 분석 - 해외 침입저항 성능 시험·인증체계 비교분석 - 국내 관련 성능 시험·인증 체계분석 - 국내 시험·인증 체계 비교분석 - 국내 방법하드웨어 성능 시험·인증 체계 모형 제안
	6	- 과제명: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조영진 외(2015) - 연구목적: 범죄유발요인 측정도구를 유형화하고 실무 활용을 위한 범죄위험평가모델 및 CPTED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CPTED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국내외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분석 및 범죄위험평가 도구 개발 - 유형화한 범죄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사례 지역에 적용·평가 - 사례지 주민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 범죄위험평가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범죄자료 분석, 공간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도구 도출 - 도출한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평가함으로써 도구의 점검 및 활용방안을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연구자(년도): 조영진 외(2016) - 연구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민원자료 수집 및 분석 - 관련 법령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 관련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민원분석 - 국내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 해외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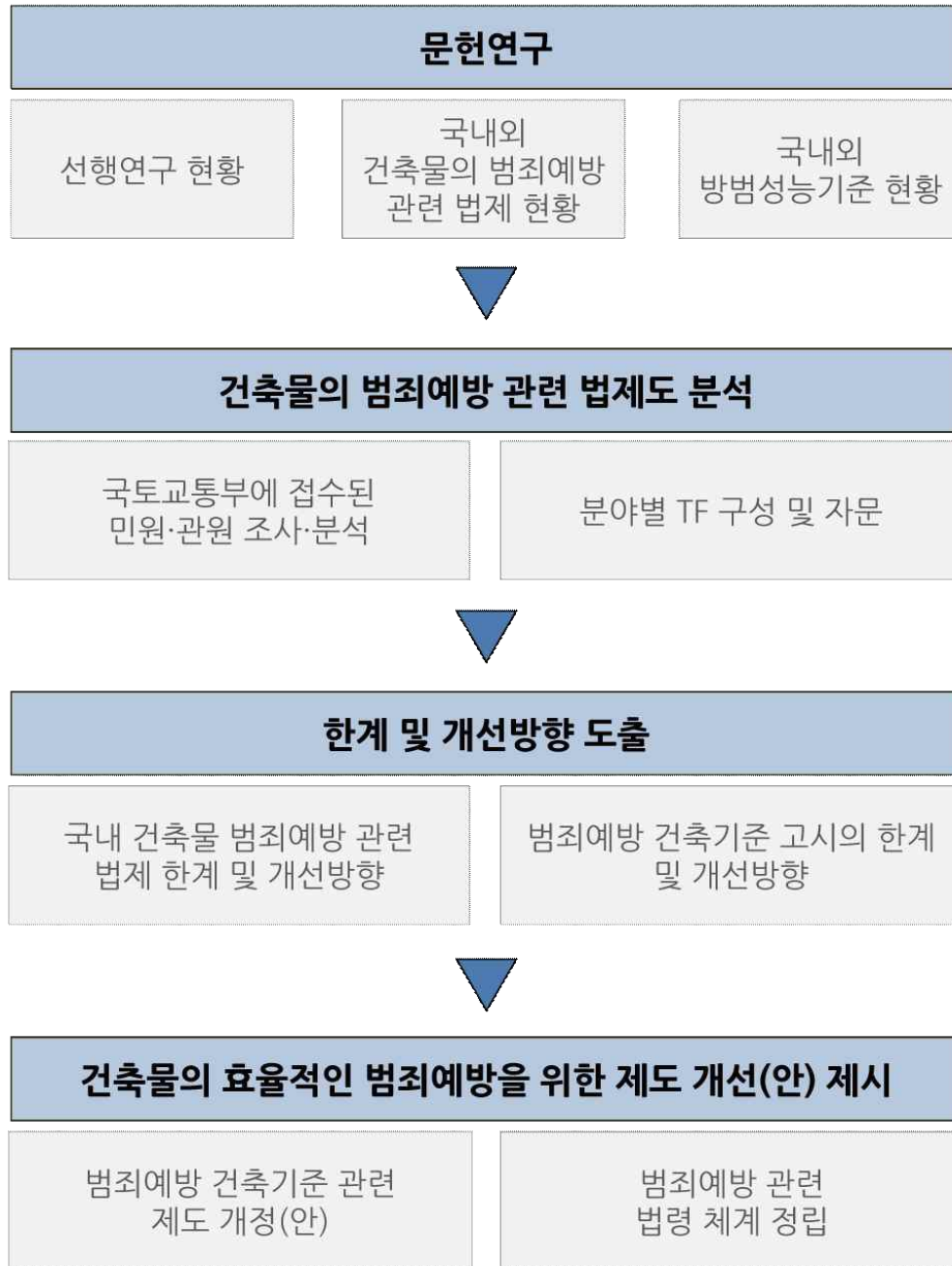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범죄예방 관련 제도는 다양한 법령에서 명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로써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로 연구 범위를 한정
 - 실질적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민원 분석과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관련 제도 검토
 -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제도 개정(안)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기준 현황 조사·분석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이어지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일련의 법체계의 개정방향 제안
 -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제도 개정(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 관련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 등 포괄적 TF 구성을 통한 자문
 - 현행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공공·학계·실무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민원자료 수집 및 분석
 - 건축법 등의 범죄예방 관련 민원 자료 및 분석
-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제도 분석
 - 국내 건축물 방법성능기준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기준 현황 분석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기준 현황 분석

1. 국내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률
2. 국내 건축물 방법성능기준 관련 현황
3. 국외 건축물 범죄예방 법률 및 방법성능기준 현황

1. 국내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률 분석

1)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분석

□ 건축법령

- 건축법 [법률 제13325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5호]
 -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행정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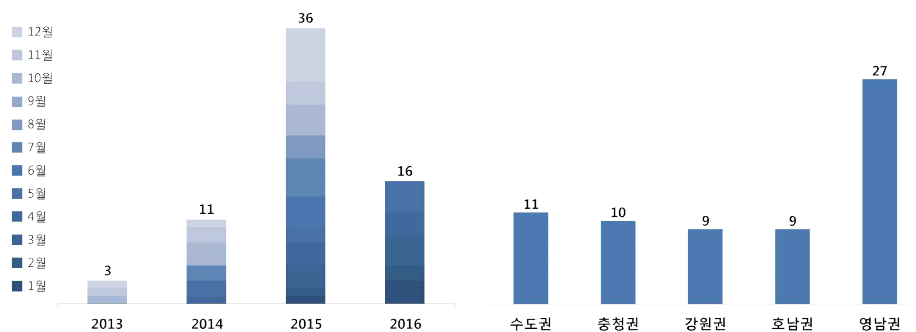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 201504.01., 제정]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
 - 총칙, 범죄예방 공통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총 3장 15개 조문, 2개 부칙, 1개 별표로 구성
 - 제1장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3개 조문으로 구성
 -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은 셉테드 기본원리에 기초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제시
 -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적용대상의 용도별로 범죄예방 기준을 명시
 -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례를 통하여 인허가, 사업승인, 심의 신청 시부터 적용토록 명기
 -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에서 건축물 창호의 설치 시 침입 방어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에 관한 별표로 한국산업표준(KS)의 문, 창, 셔터의 동하중

재하시험(KS F 2637)과 정하중 재하시험(KS F 2638)의 시험방법 및 기준 인용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기타, 2013.01.19., 제정]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기초가 된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물 범죄 예방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국내 최초 행정문서
 - 적용대상, 적용범위,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공동주택 설계기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설계기준,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명시

□ 자치법규

-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2013.01.09.)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유관 법제도 빠르게 도입
 - 권역별로 수도권 11개, 충청권 10개, 강원권 9개, 호남권 9개, 영남권 27개로 총 66개의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정(2016년 5월 16일 기준)
 - 2013년 10월 30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필두로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2016년 5월 16일 기준)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등 조례의 명칭은 다소 상의하나, 대부분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내용은 유사



[그림 2-1]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 연도별 · 권역별 제정 현황

[표 2-1]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2016.05.16. 기준)

권역	내용
수도권 (11)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1.07., 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6.04.08., 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2014.12.04., 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2015.12.31., 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2015.10.08.,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08.06., 제정]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2013.11.11., 제정]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12.28., 제정]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2015.04.20., 제정]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2015.07.03., 제정]
충청권 (10)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7.13., 제정]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2015.07.20., 제정]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2016.05.02., 제정]
	서산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2016.03.07., 제정]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2016.03.15., 제정]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2015.05.11., 제정]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2015.11.16., 제정]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10.28., 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6.05., 제정]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11.13., 제정]
강원권 (9)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12.04., 제정]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5.03.06., 제정]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5.11., 제정]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5.13., 제정]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1.08., 제정]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5.12.31., 제정]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2016.04.15., 제정]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3.07., 제정]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5.11., 제정]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6.04.05., 제정]

권역	내용
호남권 (9)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2016.01.07., 제정]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3.16., 제정]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6.01., 제정]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5.11., 제정]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05.01., 제정]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4.30.,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2015.12.30., 제정]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2015.11.25., 제정]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10.08., 제정]
영남권 (27)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3.10.30., 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1.01.,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8.13., 제정]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6.02.15., 제정]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10.13., 제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05.01., 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8.12., 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10.13., 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07.03., 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4.11.07., 제정]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2.23., 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07.01., 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6.12., 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11.12.,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10.01., 제정]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12.31., 제정]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07.03., 제정]
영남권 (27)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06.01., 제정]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12.21., 제정]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10.13., 제정]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6.02.22., 제정]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3.24., 제정]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7.1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2015.04.30., 제정]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3.12.31., 제정]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4.04.25., 제정]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3.31., 제정]

2) 범죄예방 관련 관계 법령 현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범죄예방’이라는 용어 사용
 - ‘범죄예방’의 용어가 들어간 조항에는 ‘범죄예방 대책 혹은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내용이 대다수
 - ‘셉테드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범죄예방이 실제 셉테드를 전제로 하였다고 단정하기엔 미흡
- ※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시행되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5호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삭제된 상태(2015.07.06. 삭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2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정비계획의 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8의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6)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 7)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 8)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 9) 도시공원이 공적이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 10) 도시공원의 설치·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할 것

2. 국내 건축물 방법성능기준 관련 현황

1)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조사 · 분석²⁾

- KS 기준 제정의 목적
 - KS 기준은 CPTED 기본원리 중 접근통제를 통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 경로가 되는 창호, 출입문, 셔터의 침입저항성능에 대한 기준 제시
- KS 기준 내용
 - KS F 2637은 창호, 출입문 등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저항성능을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제시
 - KS F 2638은 창호, 출입문, 셔터의 틀과 구성패널 사이의 틈을 통해 드라이버나 지렛대를 이용하여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저항성능을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제시
- KS F 2638(정하중 재하 시험) 예시
 - 건물에 설치하는 문 세트와 창 세트, 셔터 등이 침입 범죄에 저항하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하중에 견디는 힘을 측정

《시험절차》

재하 방향은 시험체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도구를 사용해서 침입하는 경우 힘은 문과 창이 열리는 방향 또는 잠금 장치의 래치가 움직이는 반대의 방향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을 규정할 수 없다. 시험 시 의뢰인이 설정한 공격면에 의해 그 방향도 정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재하시험은 예비가압과 시험가압으로 진행된다. 예비가압을 통해 영점을 보정하고 시험가압을 실시한다. 예비가압의 압력은 0.3kN을 규정하였으나 시험가압의 압력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제품의 종류마다 달라지므로 향후 제품 성능인증을 위한 규격에서 제품별로 규정될 것이다.

2)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

재하시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압지점 반대편에는 변위측정장치를 설치한다. 예비가압을 통해 예상되는 변위를 인지하여 측정장치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슬라이딩 창 의 경우 재하방향이 창의 개폐방향과 일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 유리에 압착패드를 부착시켜 하중을 가하고 변위측정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하중점은 F1, F2, F3으로 규정하였으며 유리나 패널 같은 끼움재가 없는 문의 경우 F1지점의 재하를 생략한다.

셔터의 들어올림 침입저항 시험은 일반적으로 잠금 장치가 중간에 있거나 양 가장자리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기 이외의 자리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위치를 포함시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SDT-Korea) 단체표준 조사 · 분석³⁾

- 단체표준 제정의 배경 및 목적
 - 산업표준화법 제 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협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에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단체표준 관리업무규정(한국표준협회 규정)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거쳐 제정
- 단체표준 내용
 - (방법창살): 방법창살의 성능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동하중 시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시험원에 의한 침입저항 시험을 진행하여 S1~S5 등급으로 분류
 - (창호용 잠금장치): 창호용 잠금장치의 성능 평가는 개폐반복성, 체결력, 내충격성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분류

3) 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http://www.sdtkorea.or.kr>)

- (방법문): 방법문의 성능 평가는 KS F 3109 보통문의 성능을 만족해야하며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동하중, 정하중 시험 진행한 후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시험원에 의한 침입저항 시험을 진행해서 이들 제품을 S1 ~ S4 등급으로 분류
- 단체표준 적용범위 및 평가방법
 - 국내에서 발생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의 주경로가 되는 방법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방법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 주거의 침입은 다양한 도구, 침입기술로 이루어지며 범죄자의 침입기술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시험설비를 통한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시험원이 직접 침입시험을 진행

[표 2-2] 단체표준 적용범위 및 평가방법

대상	적용범위	평가방법
방법창살	창살을 고정시키는 철물에 의해 그 성능이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고정시키는 철물의 사용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하중 시험 • 시험원에 의한 침입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시험: 시험체를 공격하여 취약지점을 확인하고 소음측정 -본시험 : 규정된 도구를 이용하여 예비시험의 결과에 따라 침입 방법을 결정하여 실시 -시간 측정 -공격위치와 공격 높이 지정 •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보고서 작성 • 시험결과 평가
창호용 잠금장치	창호에 사용하는 부속물 중 잠금장치인 오토록 ⁴⁾ 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평가(겉모양 및 기능, 재질) • 개폐반복성 시험: 개폐반복시험은 30,000회 왕복 시험 후 부품의 파손이 없으며,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 • 체결력 시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창이 열리거나 부품의 손상이 없어야 함 • 검사: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p>방법 문</p>	<p>주거 및 상 업 시 설 에 사 용 되 는 출입문 중 방법을 목 적으로 하 는 방법문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성능 시험 : 개폐력, 개폐반복성, 비틀림 강도, 연직 하중 강도, 내충격성, 내풍압성, 수밀성, 기밀성 시험은 KS F 3109에 따라 시험 • 동하중 시험 : 시험절차는 KS F 2637에 따르며 낙하높이(강성체 충격원 165mm, 연질체 충격원 800mm)를 설정하여 충격원 낙하 • 정하중 시험 : 시험절차는 KS F 2638에 따르며 하중점(끼움재의 모서리, 로킹지점 사이, 로킹지점)에 따라 시험하중과 압력패드의 형태를 달리하여 시험 • 시험원에 의한 침입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시험: 시험체를 공격하여 취약지점 및 소음을 확인하고 본시험에서 사용할 적절한 침입 도구와 침입 방법, 공격방법을 설정 -본시험 : 규정된 도구를 이용하여 예비시험의 결과에 따라 침입 방법을 결정하여 실시 -시간 측정 -공격위치와 공격 높이 지정 •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보고서 작성 • 시험결과 평가
-----------------	--	--

* 출처: 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2014), 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 단체표준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

- 4) 슬라이딩창에 부착된 창익 잠금장치로 창짝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는 로킹장치와 손잡이로 구성된 제품
- 5) 방법문은 KS F 3109(문세트)에 규정된 강철제문으로 수동으로 개폐되는 구조에 한하며 전기적 장치에 의한 구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3. 국외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 기준 현황 분석

1) 영국의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 의회입법에 해당하는 3개의 상위법(인권법, 범죄와 무질서 법, 지방정부법)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제1조, 8조)하여 범죄 피해 발생 시 건설사,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 가능⁶⁾
 -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범죄 및 무질서 감축을 위해 도입된 의회입법으로 지방정부 및 공동체의 범죄 예방 및 관리책임 명시(제5조, 6조, 17조)하여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셉테드 적용의 활성화 유도⁷⁾
 - 지방 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서는 제1장 제4조 제1항의 지역개발 전략 규정을 통해 영국 내각 부총리실(ODPM)에서 도시계획정책안(Planning Policy Statement, PPG1, 2004년 2월)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포함 명시
- 정부입법에 해당하는 하위법인 건축규정(Building Regulation)에서 Part Q Security”를 신설을 통하여 신축 주택의 무단침입(Unauthorised access)방지 의무화(2015년 10월)
 - “Part Q Security”의 Q1조항은 “(a)모든 주택과 (b)주호침입이 가능한 건물의 모든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규정
 - “Part Q Security”은 「건축물법(The Building Act 1984)」에 의거하여 제정된 「건축규칙(Building Regulations)」의 부칙인 14개 건축물의 기술적인 부분⁸⁾ 중 하나로 2015년에 새롭게 신설

6) 김남정 외(2014), 「기 개발 주거단지의 CPTED 적용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p.52.

7) 박현호(2014),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p.42.

8) 참고 : <http://www.planningportal.gov.uk/buildingregulations/approveddocuments/>

- 건축규정 5항(Regulation 5)에 따르면, 건축규정 3항(Regulation 3)에서 정의하는 건축행위에 해당 시, 용도의 재료변경(material change of use)⁹⁾하는 부분에 Part Q의 필수사항들이 적용
- 이 규정에 세부적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문서Q(Approved Document Q, ADQ)가 있으며, 문과 창문을 통한 무단침입을 막기 위한 5가지 표준 제시¹⁰⁾
- 행정문서로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2012) 등에서 셉테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NPPF¹¹⁾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개발 성취(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계획수립(Plan-making), 의사결정(Decision-taking)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58조, 69조, 156조에서 계획 수립 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고려 의무 명시
 - 그 외 주거용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지침인 Code for Sustainable Homes: A step-change in sustainable home building practice(CSH)(2006), Guidance on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validation(2010), The London Plan(2011) 등 다수의 행정문서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 포함
-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범죄위험평가, 관련 인증 등을 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구 ACPO CPI)가 주도
 - SBD(Secured By Design)는 전국경찰지휘관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에서 내무부(Home Office) 산하 범죄예방국(Crime Reduction Unit)의 후원과 교통지자체부(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Regions, DTLR, 현 부총리실)와의 협의 하에 시작¹²⁾

9) APQ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이전에 한 목적으로 쓰였던 건물이나 건물의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

10) Approved Document Q: Security - Dwellings(2015), p2.

11) PPS, PPG, MPS, MPG 등 기존에 여러 문서로 분산되어 있던 국가단위 공간계획관련 지침 내용을 하나로 통합·구성한 국가계획정책 안내서

12) 유광흠 외(2014), 전게서, p.47

- 비영리 기관으로 주택, 학교, 상업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별 가이드라인 발표 및 건축물 부품별 방법성능 제품인증
- Award 제도를 통해 일정수준의 방법성능을 갖춘 건축물 인증하며, SBD 지원절차 관리 및 인증 업무는 범죄예방설계 경찰관 DOCO(the police Designing Out Crime Officer¹³⁾)가 수행¹⁴⁾

2) 호주의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 연방법률로 셉테드 관련 법률은 Proceeds of Crime Act 2002이며, 298조에 서는 범죄예방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범죄수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정
 - 본 법에 의거하여 국가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National Community Crime Prevention Programme, NCCPP), 더 안전한 교외지역 프로그램 (Safer Suburbs Programme), 학교 안전 프로그램 (School Security Programme), 더 안전한 거리 프로그램 (Safer Streets Programme) 등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교부금 지급
- 주법률로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9」 빅토리아주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eneral Code [ACT] 등이 있음
 -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9」 79c 조항에서 모든 종류의 개발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고려 명시하였으며, 이에 새로운 개발신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범죄위험성 평가(2001년)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eneral Code [ACT]는 농촌과 대규모 농지, 단독주택 계획(지역에 관계없이)을 제외한 모든 지역 개발에 적용

13) DOCO는 이전의 범죄예방설계자문관 CPDA(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와 CPTED 전문경찰관인 건축 담당 연락관 ALO(Architectural Liaison Officer)으로 알려져 있으며, DOCO를 CPDA와 ALO로 칭하기도 함

14) 참고 : <http://www.securedbydesign.com/professionals/index.aspx>

- 가이드라인은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National Crime Prevention Framework¹⁵⁾이며, 주정부에서도 다 수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National Crime Prevention Framework 은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서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개발 신청 시 범죄위험평가를 요구하고 범죄 위험최소화를 위한 기초적 설계원리를 제안한 Crime prevention and the assessment of development applications 2001 발표
 - 빅토리아주는 지역 사회를 위한 계획과 안전한 도시 환경의 디자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Safer Design Guidelines for Victoria 발표
- 1980년대부터 호주범죄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를 중심으로 셉테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당수의 주(State) 및 준주(Territory)등의 지방정부에서 셉테드 조례제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¹⁵⁾

3) 뉴질랜드의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하여 지방 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2),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이 있음
 - 2006년 개정된 지방 정부법에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장기 지역계획(Long Term Council Community Plan)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 안전도 향상’과 ‘범죄예방 및 셉테드 실천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원 관리법은 자연자원 및 물리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잠재적 범죄 및 범죄 불안감 관련 내용이 포함
-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정부법, 자원 관리법을 기반으로 제한적 접근방식(Limited Statutory Approach)과 종합적 접근방식(Comprehensive Statutory Approach)으로 지구계획(District Plan)을 수립

15) 유광흠 외(2014), 전게서, p.48.

- 제한적 접근방식에서는 지구계획에 셉테드 요소가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칙이나 평가기준은 없고 단지 개발 목적과 정책 정도가 포함
- 종합적 접근방식에서는 지구계획에 셉테드와 관련된 목적과 정책, 규칙과 평가기준이 모두 포함
- 중앙정부에서 ‘셉테드 국가 가이드라인(National Guidelines for CPTED in NZ)’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 전반에 걸쳐 셉테드 활용 장려함¹⁶⁾
 - 지방정부가 주도한 태스크포스(National Taskforce for Community Violence Reduction)에 의해 개발¹⁷⁾
 - 도시계획 및 설계, 배치, 관리전략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목표
 - 뉴질랜드에 적합한 셉테드 원리를 7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셉테드를 적용하고 시행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대상 및 적용그룹별로 제시

4) 그 외 국가의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 미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연방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별주 혹은 시 등의 지방단위로 전개¹⁸⁾
 - 템페 시의 셉테드 조례(Zoning and Development Code(ZDC))는 건축가, 계획가, 개발자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 및 계획 승인절차, 관련서류 등을 안내
 - 플로리다 주는 편의점 범죄예방 관련 조례(Convenience Business Security Act)를 제정하여 편의점의 보안장치 및 최소 시설기준을 제시
- 일본은 셉테드 관련 내용을 법률로 직접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범우량맨

16) 수원시 공원 조성 가이드라인, p.25.

17) 신의기 외(2008), 전계서, p.110.

18) 신의기 외(2008), 전계서, p.30.

선 표준인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건축물의 섹테드 유도

- 1990년부터 히로시마에서 지방 차원의 인증제도로 시작하였으며 2008년 전국통합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
- 각 도도부현의 주택관련 공익법인과 방범관련 공익법인이 공동으로 인증하며 신축과 기존건물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대상
- 인증기준 전국 공익법인이 정한 방범우량맨션 표준인증기준을 기반으로 인증주체가 각 도도부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

5) 해외 방법제품 성능기준 현황

- 대부분 국가에서 건축물 창호에 관한 방범 성능기준이 표준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있고, 성능등급 기준이 존재



[그림 2-2] 네덜란드 SKG/SKH KOMO인증 마크와 인증서 그리고 성능시험 장면
출처 :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시험 ·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2013) p.270

[표 2-3] 외국의 하드웨어 침입저항 성능/시험 표준 내용 비교

표준	하드웨어	침입저항 등급	등급 측정기준	침입도구 및 수법	통과 허용 구멍 크기
유럽표준 EN356	유리	1~8등급 체계	• 다양한 높이에서 투석 하도 끼 등 도구를 사용한 타격 후 대한 저항력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	투석 및 도구 타 격	
영국 국가표준 BS EN1627, 1628, 1629, 1630	창, 문, 방범창살, 셔터	1~6등급 체계	•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저항시간 3분~15분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한 도 구 등으로 분류	
영국국가표 준 BS PAS24	문, 창문, 창살, 샤시창, 실린더락	LPS1175의 약 2~3등급에 해당	•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에 의한 침입공격 저항 시 간(하드웨어가 침입 가 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맨손으로 방범창 등의 하드웨어를 타격하거나 제거	
영국 단체표준 LPS1175	경보기, 문, 창문, 잠금장치, 셔터 등	1~8등급 체계	•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저항시간 1분~20분	도구 카테고리 A~G까지 다양 G로 갈수록 침입도구가 더 강력하고 전력을 사용	
네덜란드 NEN 5096 및 NEN 5089	창, 문, 방범창살, 셔터	1성(★)~3 성(★★★) 등급	• 1성 및 2성 등급은 3분 이상, 3성 등급은 5분 이 상 저항(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한 도구 등으로 분 류	
일본 「건물부품 의 방범성능 시험규칙」	유리, 필름, 셔터, 도어, 샤시 및 자물쇠 등 17종류 3,227품목	등급은 없으나 기준 통과 시 인증	•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 멍이 만들어질 때까지) 5분 이상의 저항 성능. 단, 소음 을 수반하는 공격 회수 7회 (총 공격시간 1분 이내) 저 항 • 소음기준: 「100dB(데시벨) 이하이며, 90dB를 넘은 횟수가 5회 미만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여부 에 관계없이 5 분 저항이 기준 임	원의 직경 35cm, 타원 40cm X 30cm, 직사각형 25cm X 40cm
호주 AS 3555.1	문, 창문, 스카이라이 트(천창), 환기구, 마루바닥	10분 이상을 견디는 10분 등급과 5분 이상을 견디는 5분 등급으로 2개 등급	•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격시험 레벨은 1~6레 벨. 1레벨은 성인 1명이 일반연장으로 침입공격하 는 수준, 3레벨은 1명이 전기사용 도구와 일반연장 으로 공격하는 수준, 6레 벨은 2명이 산소용접기와 일반연장으로 공격을 하는 수준	도구 카테고리 ① 일반연장(common hand tools) : 플 스크루드라이버, 커 터 해머, 도끼, 바 등단 길이 1.5미터 무게 3.6kg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함, ② 전기 사용 도구, ③ 유압 잭웨지(단, 힘 은 2.5톤 이하), ④ 산소용접기 의 4단 계화	①최소 너비가 15센티미터 이 상의 직사각형, ②직경 28센티 미터의 원, ③ 빗변이 50센티 미터 이상인 2 등변 직사각형 중 하나

* 출처: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2013), 「방범문, SPS-SDT0002-2044」, 한국방범기술산
업협회, pp.20~21

6) 시사점

- 국가별 법령체계가 상이하나 상위법에서 국민의 안전한 환경에 범죄예방 환경을 포함하고 하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이를 구체화 함
- 정부차원의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역별 특성과 용도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이드라인 발표
- 영국 SBD(Secured By Design)를 주도하는 Polic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구 ACPO CPI), 호주의 범죄과학연구소 등 셉테드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조직을 통한 관련분야 연구개발과 제도화 지원
-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대상지 범죄위험평가에 기초한 사업 수행을 의무 적용을 통하여 계획 단계부터 셉테드 도입(영국, 호주)
- 영국의 SBD Award, 일본의 방범우량맨션 등 셉테드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통한 셉테드 보급 확산
- 건축물 창호의 방범성능에 관한 국가 표준이 있으며, 방범성능의 시험은 시험원에 의한 시험을 주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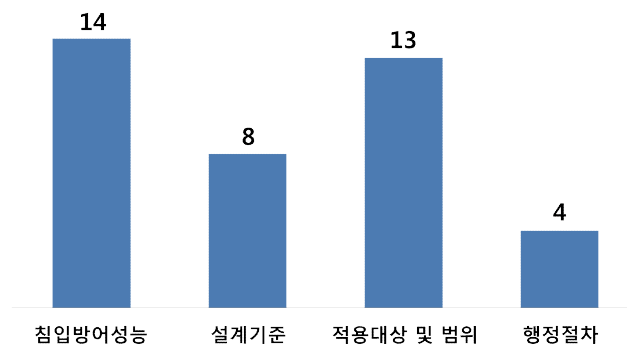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민원 및 전문가 의견 분석

1.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민원 조사·분석
2. 전문가 의견조사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민원 조사·분석

1) 접수 민원 유형화

-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된 2015년 4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로 접수된 39건의 서면 민원 분석



[그림 3-1] 국토교통부 접수 민원 분석 결과

- 총 39건의 민원·관원은 모두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관련으로 ‘[별표1]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관련 민원’, ‘설계기준 관련 민원’, ‘적용대상 및 범위 관련 민원’, ‘행정절차 관련 민원’ 총 4가지로 분류

- 범죄예방 건축기준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민원 외,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한 민원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적용 대상 및 범위 관련 민원)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
 -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른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주택법」 제16조, 「건축법」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민원
 -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의거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민원
- (별표1 침입방어 성능기준 관련 민원) 총 14건의 민원 발생
 - 창문, 출입문, 셔터에 대한 침입 방어 성능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련한 민원
- (설계기준 관련 민원) 총 8건의 민원 발생
 - 특정 장소의 방범시설(CCTV, 비상벨 등)의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고시의 세부 설계기준에 관한 민원
- (행정절차 관련 민원) 총 4건의 민원 발생
 - 허가 또는 신고절차, 시기와 평가기관, 평가기준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행정절차에 관한 민원

2) 접수 민원 내용 분석

□ 적용대상 및 범위 관련 민원

-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건축물 용도변경시에 적용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민원 발생
 - 건축법 제19조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기존 창호에 대해 침입방어성능을 인증하거나 창호를 교체해야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 발생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용도변경 사례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 창호의 침입방어성능 문제로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건축위원회 심의일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일 사이에 본 고시가 시행되어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 소매점에 적용되는 기준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일용품 소매점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민원 발생

□ [별표1]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관련 민원

- 별표1에 따른 성능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명문화된 절차가 부재하여 민원 발생
- KS F 2637, KS F 2638에 따른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창문 및 출입문 설치 관련 민원 발생
 -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 선택 및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 발생
 - 별표1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침입방어성능이 확보된 창문과 출입문이 상용화되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 발생
 - 인증을 받은 소수의 업체가 소량 주문 생산성의 문제로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품 설치가 어려워 민원 발생
- 별표1의 인증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입문의 방법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 발생
 - 하향식 피난구의 출입문이 별표1 침입방어성능기준의 적용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민원 발생
 - 하향식 피난구는 침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취약하나 피난구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법성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
- ※ 질의자는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건축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규정되어 있어 방법성능이 확보됨에 따라 별표1에 대한 기준적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 설계기준 관련 민원

- 제시된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으로 인해 판단에 어려움이 따라 민원 발생
 -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10항에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움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에서 옥상 출입구와 계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 폐쇄회로 텔레비전 한 대로 설치 위치 기준에 대한 두 조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위치에 설치할 경우 적용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제시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범죄예방설계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에 고시된 기준적용 여부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움에 따라 민원 발생
 - 지상주차장만 설치되어 자연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경우에도 주차장의 비상벨 설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발생
 - 도어체인의 설치가 어려워 문을 열지 않고 세대 내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발생
 - 계단실이 건축물의 내부에 있어 외부로 뚫린 창 설치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발생
 -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의무에 대한 조항이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발생

□ 행정절차 관련 민원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대한 이행서류 제출일 및 검토자에 대한 문의 발생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와 평가기관 등 절차에 대한 문의 발생

2.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개정안 검토 및 보완을 위해 분야별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F를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효율적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정방향 및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을 도출

□ 조사 방법 및 기간

- (방법) 매 회차 목적 및 안건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기간) 2016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개월간 진행
- (대상) 범죄 관련 학계, 공기업, 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

[표 3-1] 전문가 TF 위원 명단

성명	소속직급	분야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셉테드
하미경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셉테드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셉테드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셉테드
윤혁경	A&U 대표	건축법제도
김두성	경찰청 생활안전과 계장	경찰협업
박인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사	방법성능시험
백윤기	금천구청 건축과장	건축인허가
박준승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이사	건축설계
이경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주무부처

□ 세부 일정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6일 15시,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
 - (목적 및 안건) TF 회의 전 건축법 등의 범죄예방 관련 내용의 개정방향 설정 및 추진 전략 수립
 - (참석자) 이경훈 교수(고려대), 윤혁경 대표(A&U 건축사사무소), 박준휘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경민 사무관(국토교통부)
- 1차 TF 회의



[그림 3-2] 1차 TF회의 사진

- (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8일 16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새마을 회의실
- (목적 및 안건) 전문가 자문의견 및 주무부처 의견을 반영한 전반적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검토
- (참석자) 이경훈 교수(고려대학교), 하미경 교수(연세대학교), 박준휘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혁경 대표(ANU), 박현호 교수(용인대학교), 김두성 계장(경찰청 생활안전과), 박인욱 박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백윤기 과장(금천구청 건축과), 박준승 법제이사(대한건축사협회), 이창욱 주무관(국토교통부)

- 2차 TF 회의



[그림 3-3] 2차 TF회의 사진

- (일시 및 장소) 2016년 8월 5일 16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무궁화 회의실
- (목적 및 안건) 1차 전문가 TF회의 의견 및 주무부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전반적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검토
- (참석자) 이경훈 교수(고려대학교), 박준휘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현호 교수(용인대학교), 박인욱 박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준승 법제이사(대한건축사협회), 이창욱 주무관(국토교통부)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적용해야하는 건축물 재검토 논의
(의무적용 건축물에서 제외시켜야 할 대상)
 - 범죄위험보다 대피문제가 더 중요한 문화시설(극장, 미술관)같은 건축물처럼 위험정도가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

(의무적용 건축물에서 포함시켜야 할 대상)

- 의무적용 대상으로 되어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형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안전하지만, 의무적용 필요
 - 소형주택이 권장이 아닌 의무로 적용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
 - 소형주택들은 출입통제만 되면 범죄발생건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동현관문에 자동잠금장치(전자식 도어락)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배관을 타고 침입이 용이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
 -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의무사항보다는 특정시설(공용화장실)이나 특정공간(주차장, 건축물 후면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 범죄예방 관련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보통 전담기구 설립은 법령에서 지정하고, 구체적인 기관에 대한 설명은 시행령에서 명시
 - 전담기구 지정에 대한 신규조항이 제시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범죄예방 기본 법안이나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신규조항은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 방법성능기준에 대한 논의
(현재 별표1 방법성능기준 내용과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
 - 방법성능기준은 쉬운 개념과 시중에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누구나 인증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현재 별표1과 같은 방법성능기준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야함으로 제품화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 ※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과 같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침입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보다는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시켜 들어오기 때문에 ‘강도’와는 관련이 없고 부품과의 문창호의 관계가 있음

※ 현재 별표1은 방화문을 설치할 경우 만족되는 기준이며, ‘강도’와 관련한 침입방어성능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음

※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손으로 방법성능 표준화에 대해 시험하고 있지만 사람의 숙련도 등의 요인에 따라 방법성능이 달라지는 한계 존재

(별표1을 삭제하고 체크리스트 제시에 대한 논의)

-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활성화 유도

- 그러나 체크리스트는 건축가들의 반발과 창의성의 제한이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 확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 존재

- 따라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시하기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¹⁹⁾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항목에 범죄예방 관련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 범죄위험평가(범죄영향평가)에 대한 법개정(안) 제시에 대한 논의

-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활용도에 비해 너무 선진화된 조항 제시인 것 같아 당장 시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위험도 평가 자체를 사람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처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기준을 더 강화하고, 낮은 지역에는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기준만 제시하는 편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 예를 들어, ‘유흥시설이 반경 몇 km 이내 혹은 특정지역에 생활약자(어린

19) 별표2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종류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안전 확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가 있음

이, 여성, 노인)가 몇 %이상인 경우에는 80점을 만족시켜야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70점만 만족시켜도 된다.’ 라는 기준에 대한 조항 명시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경찰청에서 경찰서별로 범죄진단예방팀(CPO)을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찰에 의뢰하여 이 지역의 범죄통계와 범죄유형별 조사결과를 제공받으면 건축주입장에서 최소한 위험범죄에 대해 염두해 두고 설계할 것이므로 경찰 관련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 필요

- 범죄위험평가(범죄영향평가)는 개별 건축물이나 필지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마을단위 혹은 거리단위의 사업에 적용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실제 사업은 관련 법 절차대로 진행하되, 범죄예방 관련된 사항들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 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됨

□ 1차 전문가 TF회의 결과

- 셉테드 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

- 센터의 구체적인 수행 업무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센터 설립목적 및 담당 업무,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 관련 업무 추가 검토 필요

- 인허가과정이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센터 설립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은 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방안 검토 필요

- 센터에서 범죄예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센터의 역할이 경찰의 역할과 충돌되지 않도록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통한 센터운영방안 고려 필요

※ 경찰의 협조를 통해 지역특성, 범죄특성, 범죄통계 등 지역범죄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무부, 경찰청 등의 범죄예방기본법과 연계하여 센터의 역할 등을 정립해야 함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범죄위험평가
 - (용어정의)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범죄위험평가 용어(범죄위험진단, 범죄예방진단 등) 및 범위수정 검토
 - (타당성) 범죄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가가 설계과정에서 범죄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시에 범죄위험평가가 포함되는 것은 부적합하며 해당 사항은 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 주체) ‘예, 아니오’로 체크되는 범죄위험평가 체크리스트는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가 평가주체가 되어야 함
 - (매뉴얼 개발) 건축계획의 규모에 따른 위험평가방식의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범죄위험평가의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이 필요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별표1]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기준
 - (심의 주체) 침입방어 성능기준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협회나 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심의하는 방안 고려
 - (방법시설의 효과성)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건축물 내부로 침입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물 설계관련 범죄예방 기준이 대다수 삭제되어 간결해질 수 있음
 - (특정업체 독점문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다양하지 않을 경우, 특정업체가 독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제품의 출시 및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방안 고려 필요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 : 고시 조문내용
 - (문제발생 조항 삭제) 구체적인 방법과 수치를 제시할 경우, 다른 기준과의 충돌 또는 시공방법의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과 현실에서 충돌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 삭제 고려

- (구체적인 조항 지양)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는 불필요한 설계 및 시설물 설치 문제를 초래하므로 전반적으로 셉테드를 위한 목표수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문이 서술되어야함
- (구체적인 조항 권장) 인증을 위해서는 설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조항 수정 의견)

《세부조항 수정 의견》

- ※ 제2조(용어의 정의) 7호 ‘범죄위험평가’에서 ‘범죄’ 대신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으로 구체화
- ※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에서 공간의 경계에 단을 두는 조항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각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 있음
- ※ 제7조(조경 기준) 2항에서 수종에 따라 시야확보를 위한 식재 방법이 다르므로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삭제(건축물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건축물에 수목을 붙여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 해외사례가 있음)
- ※ 제8조(조명 기준) 3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눈부심을 방지하면 되므로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삭제
- ※ 제8조(조명 기준) 빛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서술
- ※ 제10조(범죄위험평가의 실시) 3호를 1호로 옮기는 것이 적절
- ※ 제12조(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에 대한 기준) 2항3의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 삭제, 6항의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목적만 서술하여 왜 이런 제한을 두는지 그 목적에 맞게 방안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함

- ※ 제12조(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에 대한 기준) 10항2의 ‘설비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서술이 필요하며, ‘창문 등 개구부와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설치 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삭제
- ※ 제13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에서 제시한 전자식 도어락은 건축법 접근통제 방법에서 언급된 바 없음
- ※ 제13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 11항의 건축물 측면과 후면공간의 접근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경우, 허가를 위해 불필요한 설계 및 시설물 설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삭제

- 기타의견
 - 공개된 범죄통계자료가 부정확하므로 범죄위험평가 시 정확한 범죄데이터 분석을 위한 경찰 협조관련 조항 신설 고려
 - 전반적인 기준이 방법하드웨어를 통해 방법성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서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필로티 건축물의 2층 침입사례에서 건물 사이의 이격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통해 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격공간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ex. 방법창 설치)
 - 건물 후면부 접근통제를 위해 막아놓은 공간에서 방법창을 뜯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접근통제 조항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에 용도변경과 대수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칙 제2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건축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타법에 위임하고, 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법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의 셉테드 관련 조례와 충돌되는 항목에 대한 고려 필요
 - 행정규칙 개정 체크리스트(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서 적합/부적합만으로는 판단 불가능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공동화장실, 비상계단, 주차장, 건물 후면부·측면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시각, 청각 등에 의한 자연적 감시 방안)
 - 건축법 제53조의 2에서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설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목록 및 기준은 전문기관의 자료정리를 통해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2차 전문가 TF회의 결과

- 범죄위험평가 수행 방안 논의
 - 범죄위험평가에서 범죄데이터는 건축가가 다룰 수 없으므로 범죄데이터 기반의 범죄위험평가는 경찰에서 수행하고, 건축가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범죄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개정
 - 범죄위험평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범인증을 수행하여 평가의 가능성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 ※ 친환경건축의 경우, 건설사를 통해 1, 2년 간의 시범인증 후 본인증으로 제도와
 - 범죄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경찰의 업무로 넘길 경우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설계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의 의견서를 받는 정도만으로도 효과적인 셉테드가 가능
 - 범죄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나누어도 등급에 따라 방법성능확보를 위한 설계방식과 정도에는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불필요
 - 범죄위험평가는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국의 맨체스터와 같이 설계과정부터 경찰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 셉테드학회의 가이드라인은 설계시 방법성능확보를 위해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건축가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범죄위험평가 또한 지역의 범죄유형, 범죄발생적 특성, 범죄유발요인 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수행 가능
- 건축물 방법성능확보 방안 논의
 - 별표1의 목적이 방법하드웨어를 확산시키는 것이므로 출입문과 창호의 강도를 기준으로 방법성능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법효과가 있는 내용 필요
 - 별표1의 내용을 권장사항으로 두고 해당 기준의 의무화에 대해 연차를 두고 단계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 방법성능이 높은 제품이 출시되어도 현재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도를 단계별로 확산시킨다면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검증된 제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방법성능확보 여부를 창호업체에서 발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기준 부재시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 발생 예상
- 출입문은 철문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별표1의 출입문에 대한 기준에서 강도에 대한 평가는 부적합하며, 보통 철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경우보다는 시건장치를 제거하고 침입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화된 시건장치에 대한 평가 수행 필요
- 건축물 시공시에 알루미늄 틀과 유리를 현장에서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시공하므로 완제품에 대한 성능확인 불가
- 창문은 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깨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강도에 대한 평가는 부적합하며, 시험원에 의한 방법성능 평가방안 필요
- 유리창 자체의 방법성능을 확보하는 것 보다 창문에 접근을 못하도록 설계하여 침입방어를 막는 방법이 더 바람직함
- 방법성능확보에 건축물의 기준뿐만 아니라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항목 추가를 통해 동네의 셉테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기타의견
 - 다세대, 다가구 기준 중 외벽에 부착된 시설을 통한 침입 예방에서 말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필요
 - CPTED의 다섯 가지 기본원리에 대한 용어정의를 좀 더 명확히 서술될 필요가 있음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권장 건축물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아파트의 경우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아파트보다 범죄발생률이 높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 실질적으로 범죄발생가능성이 높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이 의무화되어야 함
- 침입방어성능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 필요
 - 별표1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설치에 어려움이 따라 민원 발생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체크리스트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내용 추가 방안 검토 필요
-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내용 재검토 필요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추상적인 조문으로 인해 설계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 발생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조문으로 인해 다양한 설계방법이 사용되지 못하고 단일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기준의 구체성에 대한 고려 필요
- 용도변경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여부에 대한 내용 명시 필요
 -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례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 발생
 - 부칙에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명시 필요

- 셉테드의 보급 및 확산 필요
 - 해외 셉테드 관련 법제도 및 사례에서는 건축물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지역의 여러 특성을 반영한 설계안 도출이 가능
 -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준정립 및 보급·확산을 통해 범죄예방 건축설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인증제도,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이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1.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1.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 건축법 개정 내용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개정 -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지정
 - 건축물 세부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마련 필요
 - 용도·지역별 범죄발생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 마련 필요
 -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필요
 - 건축사, 공무원 등 쉼테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 쉼테드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의 개정을 통하여 제3항과 제4항을 신설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 마련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개정 - 의무/권장 대상건축물 개정
 - 실제 범죄발생이 높은 소형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셉테드를 의무화
 - 의무시설 중 침입범죄 위험이 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을 삭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①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u>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u>	1. 공동주택 <개 정>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u>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u>	<삭 제>
5.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u>7. 수련시설</u>	<삭 제>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신 설>	<u>10.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u>

-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개정 -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항목 신설
 - 법 제53조의2제4항(개정안)의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업무범위와 지정요건에 관한 항목 신설
 - 건축물 범죄안전에 대한 기준 수립과 이에 관한 부대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자격을 공공기관으로 제한
 - 범죄예방 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며, 범죄예방 기준의 도입 초기인 만큼 관계자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여 이를 센터의 업무에 포함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생 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수립 지원
2. 대상지 용도지역별 범죄예방 기준 수립 지원
3.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4. 범죄예방 기준 등 범죄예방 환경에 대한 교육
5.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연구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 체크리스트에 범죄예방 관련 검토 추가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관련 항목을 명시하여 인허가시 이를 체크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조사 / 검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 / 검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 장 조 사	대지 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필요 []불필요
		형질변경의 필요성	[]필요 []불필요
		대지의 안전상태	[]안전 []불안전
		지상, 지하지장물	[]있음 []없음
	도로 현황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있음 []없음
		위반된 부분	[]있음 []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뒷쪽)			
구분	검토 내용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설계도서검토	대지및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건축법」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대지 안의 조경	건축조례 ()% 이상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 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방화구획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적합 []부적합 ()%
		용적률	도시·군계획조례 ()% 이하 []적합 []부적합 ()%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건축설비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급수설비	「건축법」 제62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승용·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조례 ()% 이상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범죄예방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합 여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종합 의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1) 주요개정 내용과 추진방향

□ 주요개정 내용

- 건축물의 침입 방어 성능과 창호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의 확인
- 기존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과 권장 적용대상 건축물의 구분의 적정여부
- 신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
-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시 고시 적용에 대한 명문화
- 기존 조문 중 해석이 모호한 문구 개정

□ 추진방향

- 시급한 부분 개정을 선 추진하고,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전면 개정 추진
- 부분 개정 : 개정이 시급한 조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정 추진
 - 범죄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신설
 - 종전 침입방어성능 시험제품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제품 도입을 권장으로 완화
 - 건축물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시 고시 적용에 대한 부칙 신설
- 전면 개정 : 쉼테드의 확산을 위한 전면적인 개정
 - 설계자의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설계 도입과 범죄예방 관련 첨단 설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창호의 침입방어제품 사용 완화)
 - [별표 1]을 개정하여 기존의 KS기준의 시험방법 외 추가로 단체 표준과 창호 생산업체의 자체시험 결과를 포함
 - 내용의 해석 상 모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문 수정

2) 조문별 개정안

①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

□ 개정 내용

-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석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수정
 - ‘1. 자연적 감시’ 용어정의 문구 수정
 - ‘2. 접근통제’ 용어정의 문구 수정
 - ‘3. 영역성 확보’ 용어정의 내용 수정
- 침입방어성능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 건축물 침입방어성능의 정의를 명시하여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이견을 좁힘

□ 개정안²⁰⁾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u>조경의</u>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적 감시 강화 "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일상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법시설 등(이하 "접근통제 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법시설 등(이하 "접근통제 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불법적인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u>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u>	3. "영역성 확보"란 <u>식재·상징물·울타리·바닥포장패턴·단차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 상징적·물리적 장치를 활용하여 특정 제한된 사람, 혹은 집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간을 공적공간과 차별화하는 것을 말한다.</u>
4. ~ 6. 생략	4.~6. 현행과 같음

20) 개정안 표에서 **강조**된 조문은 삭제 또는 수정된 현행문구이거나 추가 또는 변경된 개정문구임

〈신 설〉	7. “침입방어성능”이란 세대침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호에 대한 무단 침입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	---

② 제3조 적용대상 개정

□ 개정 내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개정
 -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포괄하는 전체 공동주택으로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침입범죄 위험요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범죄발생이 높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고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함(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현행 권장으로 유지)
 -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은 침입범죄에 대한 위험이 낮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하고, 수련시설은 삭제함
- 범죄예방 건축기준 권장 적용 대상 건축물 개정
 - 단독주택이 모두 권장이었으나, 개정안에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의무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권장 대상 단독주택 조문 개정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의무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권장 적용 대상에서 삭제
 -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권장조항 신설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p>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u>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u>)</p> <p>2. ~ 3. 생략</p> <p>4. 영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u>동·식물원을 제외한다</u>)</p> <p>5. ~ 6. 생략</p> <p>7. 영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p> <p>8. ~ 9. 생략</p> <p>10. <신 설></p> <p>② 생략</p> <p>1. 영 별표1 단독주택</p> <p>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말한다)]</p> <p><신 설></p>	<p>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삭 제></p> <p>5. ~ 6. 현행과 같음</p> <p>7. <삭 제></p> <p>8. ~ 9. 현행과 같음</p> <p>10. 영 별표1 제1호다목적 다가구주택</p> <p>② 현행과 같음</p> <p>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나목의 다중주택</p> <p>2. <삭 제></p> <p>3. 영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u>동·식물원을 제외한다</u>)</p>
--	---

③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해석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역성 확보의 기준’ 제5조의 제2항 문구 수정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생략</p> <p>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u>거나</u>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u>강화시설을 설치</u>하여야 한다.</p>	<p>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u>는 등</u>의 방법으로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u>강화</u>하여야 한다.</p>

④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제6조의 제1항의 내용 중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의미 전달을 용이하게 내용 및 문구 수정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u>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u>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u>자연적 감시가 요구되는 외부공간은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공동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과 연계시켜 일상적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⑤ 제7조 조경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제7조 2항의 내용 중 본래 조문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내용 수정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7조(조경 기준) ① 생략	제7조(조경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수목이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범죄자가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u>

⑥ 제8조 조명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제8조 3항의 내용 중 눈부심 현상을 줄이는 방법은 보다 더 다양하며, 이에 방법을 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 수정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조(조명 기준) ① ~ ② 생략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u>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u>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u>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⑦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기준 적용 완화 신설

□ 개정 내용

- 현행 [별표1]의 경우 건축물 창호의 강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침입방어성능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 필요
 - 건축물 창호 설계 시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창호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의 설계를 통하여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 창호를 보조할 수 있는 첨단 방법설비를 도입하여 현행 기준 이상의 침입방어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범죄예방설계기법과 방법설비 기술을 고려할 때 창호의 침입방어성능을 확보하는 모든 방법을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별표1]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다른 설계기법과 신기술을 통하여 침입방어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 완화 조항 신설
 - 설계기법과 신기술도입을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신설안

현 행	신설(안)
〈신 설〉	제00조(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기준 적용 완화) 건축물의 침입방어성능 확보를 위하여 범죄예방설계기법, 방법신기술 등을 도입하여 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별표1 기준 적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0조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에 대한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의무/권장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조항 제목 및 내용 개정
 - 제10조 ‘아파트에 대한 기준’에 ‘연립주택, 기숙사’ 추가
- 제10조 6항의 조경에 대한 내용 중 현 실정을 반영하여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 개정
- 제10조 8항의 [별표1]에 따른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의 침입방어 성능 기준
 - 인증제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세대 현관문 및 창문 기준의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완화
 - 상기한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기준 적용 완화 도입’ 시 다른 대안을 통하여 침입방어 성능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사항으로 존치
- 제10조 9항의 승강기·복도 및 계단 관련 기준 중 승강기·복도 및 계단의 기준과 관련 없는 수직배관설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동 외벽에 관련한 10항을 신설
- 주동 외벽에 설치된 배관 및 실외기 등 설비가 건축물 내부 침입의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주동 외벽 관련 조항 신설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p> <p>① ~ ⑤ 생략</p> <p>⑥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u>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u> 식재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⑧ 세대 현관문~</p> <p>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u>설치하여야</u> 한다.</p> <p>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u>설치</u>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p> <p>⑨ 생략</p> <p>1. 생략</p> <p>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u>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제10조(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에 대한 기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세대 현관문~</p> <p>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 <u>설치를 권장</u>한다.</p> <p>2. 세대 현관문은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하며,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u>설치를 권장</u>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⑩ <u>주동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동 외벽에 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u></p>

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 신설

□ 개정 내용

- 범죄발생이 높고, 거주민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준 신설
 - 공동 출입구, 담장, 창문과 출입문, 외벽, 건축물 측면 및 후면으로 구분하여 셉테드 기준 설립
 - 공동 출입구는 자연감시를 강화하고 접근통제시설 설치 의무화
 - 담장은 자연감시를 명시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은닉장소가 되지 않도록 계획
 - 창문과 세대의 출입문은 침입방어성능 제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증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증제품 출시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 기준으로 명시
 - 의무화에 앞서 침입방어성능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정비, 인증제품의 출시 등의 필요
 - 외벽은 설비시설 설치 시 자연감시를 강화하고 주택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통행에 이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측면과 후면의 자연감시 강화

□ 신설안

현 행	신설(안)
〈신 설〉	<p><u>제00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항의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u></p> <p><u>① 공동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u></p> <p><u>1. 공동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한다.</u></p> <p><u>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과 반사경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다.</u></p> <p><u>②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u></p>

	<p>③ 창문과 세대 출입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p> <p>1. 창문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p> <p>2. 세대 현관문은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금지하며,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p> <p>④ 건축물 외벽에 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p> <p>⑤ 통행하지 않는 건축물의 측면과 후면 공간은 은신공간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한다.</p>
--	---

⑩ 제11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의무적용 대상 용도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
- 제11조 1호, 2호의 [별표1]에 따른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 기준
 - 인증제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창호재, 출입문의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완화
 - 창호재와 출입문은 침입방어성능 제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증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증제품 출시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 기준으로 명시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1조(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는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제14조(단독주택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1.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1.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능을 갖춘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2.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한다.	2.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⑪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제12조 1항의 [별표1]에 따른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 기준
 - 인증제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출입문, 창문, 셔터의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완화
 - 상기한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기준 적용 완화’ 도입 시 다른 대안을 통하여 침입방어 성능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사항으로 존치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① 생략 1. 생략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제15조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⑫ 제13조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제13조1항의 24시간을 삭제하여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시킴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3조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⑬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 적용례 신설

□ 개정 내용

-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시에 고시 준용 여부에 대한 해석 민원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추가하여 명문화

□ 신설안

현 행	신설(안)
-부칙 <제2015-198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 >

	<p><u>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은 2016년 0월0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적용례) 개정규정(000호, 000호, 000호, 000호, 별표0)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	--

⑭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별표 내 건축물 창호 침입 방어 성능기준 증명 항목을 신설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별표 내용상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민원 발생 원인이 됨
 - 현재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1곳에 불과하고, 한국산업표준(KS)는 성능인증이 없으며, 단체표준 역시 미비한 상황
 - 이에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결과서, 단체표준 제품 인증서와 더불어 자기성능증명을 도입하여 창호의 제작 또는 유통업체가 이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영국,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험원에 의한 실험을 통한 인증기준의 국내 적용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한국산업표준(KS)에는 창호의 강도실험방법이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에서 단체표준으로 일부 창호부재에 관하여 시험원에 의한 실험을 통한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호에 관련하여 전체적인 표준 부재
- 관련 시험기관 및 인증제품이 부족하여 현 고시의 개정안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 -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

현 행	개정(안)
1. ~ 3. 생략 〈신 설〉	1~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 창호 침입 방어 성능기준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가. 창호의 제작 또는 납품 업체의 침입 방어 성능 확인서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결과서 다. 건축물 창호 침입 방어 성능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서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종합
2.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개정 추진방향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 종합

□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분석

- 국내 건축법에서는 범죄예방 관련하여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개 조문이 있으며,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시행령과 고시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령을 통하여 지정한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구성됨
 - 효과적인 범죄안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수법을 고려할 때 셉테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방안 부재
- 국내 범죄예방 관련 자치법규는 2016년 5월 16일 기준 67개 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등의 명칭으로 도입하고 있음

- 자지단체의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디자인 기준 수립,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 시행, 관련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중앙부처의 근거법령이 없어 실제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법령 마련이 시급
- 관계 법령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범죄예방이라는 용어는 언급하고 있으나, 셉테드가 아닌 포괄적 범죄예방조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 건축물 대지의 주변 환경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도시차원에서 셉테드를 반영하고 있는 법률 부재
 - 건축법제에서 근린계획, 도시계획 등을 다루는 것은 법률의 목적과 범위에 벗어나는 문제가 있으며,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범죄예방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 국내 건축물 방범성능기준 관련 현황 분석

-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은 KS F 2637(동하중 재하시험), KS F 2638(정하중 재하시험)로서 창호, 출입문, 셔터에 대한 침입 저항 시험 방법을 규정한 것임
 - 시험방법을 표준으로 지정한 것이며, 실제 성능에 관한 조항 부재
 -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의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의 변형량 등의 성능은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준용한 것임
 - KS 기준은 창호 등의 강도만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침입방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원에 의한 시험 등의 도입 필요
- 단체표준으로는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의 방범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방범문에 대한 표준이 있음
 - 시험원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에 대한 등급기준도 명확하여 실제 침입방어성능에 관한 체계와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음

- 건축물 창호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잠금장치에 관한 기준만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
- 해당 표준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부족하여 관련 법률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움

□ 국외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법성능기준 현황 분석

- 영국
 - 건축규정의 Q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주택에 관하여 침입방어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승인문서Q 내에서 SBD 인증을 제안하고 있으나 타 방식으로 건축법규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우 따로 건축 인허가 부서와 상담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음
- 호주
 - NSW 주 정부의 ‘환경설계평가법 제79c조(Section 79c)’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대책 수립
- 뉴질랜드
 - 국가 지침(National Guideline)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목표 하에 핵심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 정부법을 통해 범죄 안전 관련 해당 지방정부의 계획추진 및 책임 명시
- 일본
 - 생활환경과 밀접한 맨션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각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주택과 방법관련 공익법인이 공동으로 인증마크를 부여
 -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이 있어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방법성능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 미국
 -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셉테드 도입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주로 편의점/주유소 등 범죄 다발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기준 제도화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관련 민원 조사 분석

- 2015년 4월 ~ 2016년 6월까지 총 39건의 민원 및 관원 접수
 - [별표1]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적용 대상 및 범위, 방범시설의 설치, 행정절차 순으로 민원 및 관원 발생
- 침입방어성능기준과 용도변경 시 고시준용여부 등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조문 개정이 시급하고,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문 개정 필요
 - 침입방어 성능기준 관련 시험기관, 인증제품 부재로 인한 민원
 -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의 설치여부 등 방범시설 설치 관련
 - 용도변경의 경우 준용여부, 일용품점 해당 여부 등
 - 고시 준용에 관한 서류 제출일 및 검토자에 대한 질의 등

□ 전문가 의견조사

- 셉테드 전문가, 교수, 건축사, 경찰, 공무원 등 10인의 전문가로 범죄예방 건축법제 개정 TF를 조직 및 운영
 - 범죄예방환경설계 센터 설립 필요성 및 방향
 - 범죄위험평가 도입 절차 및 내용
 - 고시 의무대상 및 권장 대상 건축물의 타당성 및 개정 방향
 - 침입방어 성능기준의 내용과 적정성
 - 범죄위험평가의 도입 방향과 내용
 - 기존 고시 조문 내용의 적정성 및 개정 방향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 건축법 개정안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의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건축물의 범죄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조항 추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 주택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만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의무 적용되던 것을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무 적용 대상으로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 추가
- 건축법 시행규칙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규칙의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의 설계도서검토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추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 건축물의 침입 방어 성능 용어 정의
- 다세대/다가구 주택 범죄예방 건축기준 신설
- 건축물 창호 침입 방어 성능기준 관계조문 개정
-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시 고시 적용에 대한 명문화
- [별표1]에 창호 침입 방어 성능기준 증명 신설
- 기존 조문 중 해석이 모호한 문구 개정

2.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개정 추진방향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단계별 도입을 통한 건축계 영향 최소화

- 해당 고시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건축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개정이 시급한 조문을 중심으로 부분개정을 먼저 시행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 중 침입방어성능 신설안
 - 제3조(적용대상) 개정안
 - 제10조, 제11조, 제12조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관련 개정안
 -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명기한 부칙의 적용례 신설안
- 향후 범죄예방 관련 분야 인식 개선으로 건축 분야 도입에 문제가 없을 때 전면개정을 통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을 높임
 - 침입방어성능 인증제도 개선, 인증제품 확산 등의 관련 분야 인식 개선 필요
 - 건축물의 셉테드에 대한 건축사 등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권장적용에서 의무적용으로 셉테드 도입확대

- 본 연구에서 침입범죄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의무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범죄 발생 위험은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용도 건축물로 점진적 확대필요
 - 용도별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설치가 필요
-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 기준은 권장적용으로 완화하였으나, 이는 현재 창호자재 산업의 실태를 반영한 조치이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해서는 의무적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침입방어성능에 대한 건축물 창호 산업계의 교육 및 계도가 필요하며, 의무적용 시 건축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셉테드 기법의

도입과 침단 방법설비 도입을 통한 침입방어성능 확보에 대한 인
센티브 방안 제시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재개정 필요

-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나, 대지를 벗어난 부분은 국내 제도상 도시 관련 법령들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도시 관련 법령의 섹테드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 건축물의 대지와 그 주변의 범죄발생 현황 및 특성에 맞추어 계획 및 설계가 추진되어야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으나, 현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구득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개정 필요

□ 건축물 방법제품 관련 인증제도 필요

- 건축물의 범죄안전을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자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축물 창호 등 관련 방법제품 인증제도 마련이 시급
- 영국, 일본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의 방법제품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제품 역시 일반화되어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구매 및 설치가 가능한 상황임
- 국내에서도 방법제품 인증 관련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과 방법제품 등급제도 등을 포괄하는 국내 기준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방법제품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관련 방법 산업계의 유관 기술개발과 홍보노력도 요구됨

참고문헌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기타. 2013.01.19. 제정.
- 건축법, 법률 제 13325호, 제53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5호, 제61조, 제3항.
- 경찰청(2014), 「2014 범죄통계」, 경찰청, pp.358~361.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KS F 2638] 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 시험”, 「e나라 표준인증」, <http://www.standard.go.kr>(2016.08.05.)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 김남정 외(2014), 「기 개발 주거단지의 CPTED 적용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p.5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박현호 외(2013a), 「방범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연구」, 경찰청.
- 박현호 외(2013b),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pp.255~292.
- 박현호(2014),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p.42.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 2015.04.01. 제정.

법제처, “범죄예방 관련 자치법규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6.05.16.)

수원시(2016), 수원시 공원조성 가이드라인,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p.25.

신의기 외(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광흠(2011),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 외(2012),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 외(2014),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영진 외(2015),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기반표준(KSA 8800:2012)」, 지식경제부.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2013), 「방법문, SPS-SDT0002-2044」,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pp.20~21.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2014),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단체표준,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단체표준”,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http://www.sdtkorea.or.kr>(2016.08.05.)

GOV.UK(2015), “Approved Document Q: Security - Dwellings”, 「GOV.UK」,
<http://www.planningportal.gov.uk/buildingregulations/approveddocuments/>(2016.07.20.)

A Study on Amendment of 「Building Act」 and Subordinate Legislation for CPTED

Cho, Young Jin
Son, Dong Pil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ould be constructed in compliance with the anti-crime standards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ince Building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was amended in May, 2014.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several suggestions about system improvement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in buildings, reviewing articles of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Anti-Crime Building Standard. System improvement plan was drawn through three process: analysis of civil complaints; analysis of legislations regarding to anti-crime for buildings; complementation of the plan by task force composed of professionals in the CPTED field.

As a result of analysis of 39 related civil complaints received from April 2015 to June 2016, articles about intrusion detection standard and application of anti-crime standard when building use is changed needs to be revised. Also, some articles which cause ambiguous meaning should be reviewed.

The task force, which was organized with 10 professionals such as professor, police officer, government officer, etc, discussed about a need of establishment of a CPTED center, validity of mandatory buildings and amendment direction and contents of intrusion detection standard and

adequacy of the contents.

Main points of related legislations amendment for crime prevention suggested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For the purpose of article 53-2 Anti-Crime for Building, article of Building Act about appointment of a CPTED center is suggested to support anti-crime building standard depending on building use and region;
- Article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expands mandatory buildings from apartment complexes with at least 500 household units to all types of houses except detached house and multi-user houses. In addition, article abou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PTED center is newly inserted;
- In order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anti-crime building standard, suitability of the standard is added to attached paper 23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Building Act, which is about building permission investigation and inspections;
- Anti-crime building standard suggests to amend overall articles: establishment of definition of intrusion detection standard and crime risk assessment; establishment of anti-crime standard for multi-family houses and multi-household houses; revision of articles regarding to intrusion detection standard of building windows and doors; stipulation for application of anti-crime standard when building use is changed; certification of intrusion detection standard of windows and doors in attached Table 1; revision of ambiguous phrases; etc;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nti-crime building standard needs to be partially revised based on articles which require urgent amendment. In order to increase practicality of the standard,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amend overall parts of the standard, developing crime prevention industry and improving awareness of crime prevention.

This research also proposes to expand mandatory building types including multi-family houses and multi-household houses that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However, since crime could take place in all types of buildings, mandatory buildings should be gradually enlarged.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CPTED center for research on anti-crime standards for various types of buildings.

Key words: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ti-crime building standards

부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7. "침입 방어 성능"이란 세대침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호에 대한 무단 침입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신 설>

【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삭 제>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삭 제>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 <신 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나목의 다중주택 <개 정>

2. <삭 제>

3. 영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신 설>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개정】

제10조(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에 대한 기준) ① 단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 ③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출입구 주변이나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차로와 통로 및 동(棟)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한다.
- ⑥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 ⑦ 주동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

확하여야 한다.

2. 주동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개 정>

2. 세대 현관문은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금지하며,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개 정>

⑨ 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제00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항의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공동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공동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한다.
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과 반사경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②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창문과 세대 출입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창문은 별표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

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에 금지하며,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건축물 외벽에 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⑤ 통행하지 않는 건축물의 측면과 후면 공간은 은신공간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한다.

【개정】

제11조(단독주택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1.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한다.
3.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4.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6.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개정】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할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 출입문은 제외한다.<개정>

-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198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

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은 201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000조, 000조, 000조, 000조, 별표0)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관련)

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어야 한다.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어야 한다.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